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 발 의 자 : 정일균, 김정옥, 권기훈,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이재숙, 조경구 의원
- ☐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 ☐ 회부일자 : 2023년 3월 8일

2. 제안이유

- ☐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의 개정(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에
따른 법률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제명 변경
-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 유기동물 등의 보호·관리, 기증·분양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 피학대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동물보호센터 동물의 입양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 ☐ 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의 지원, 동물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안 제15조)
- ☐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안 제18조)

4. 검토의견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최근 반려가구의 급증에 따른 동물학대, 안전사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바꾸어 동물복지 강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적 보완과 유기동물 입양 시의 경비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 개정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은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규율 범위 확장(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책무)는 현행 조례에서 동물의 보호·관리를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조화로운 공존 등을 조례의 목적과 책무로 규정하면서 조례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였음.

○ 동물복지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화(안 제3조)

- 안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과 이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동물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구체화하였음.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는 법 제8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동물 학대방지 및 구조, 동물보호시설의 지원·관리 등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했음.
-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해촉 사유, 회의 개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설치·운영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 원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위원회 역할 :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자문

「동물보호법」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절차 규정(안 제6조)

- 안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별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구청장·군수 등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였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병원, 동물보호 비영리단체,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자 등

- 한편, 동물등록제는 오래전부터 제도를 도입·운영한 일본, 대만 등에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이 현저히 감소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음.

-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7년이 지난 2020년까지도 등록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등록동물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와 반려동물 소유주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록 수수료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반려견 양육 마릿수 (마리) | 6,620,342 | 5,072,272 | 5,984,903 | 6,017,991 |
| 동물등록 마릿수 (마리) | 1,175,516 | 1,304,077 | 2,092,163 | 2,321,701 |
| 비율 (%) | 17.8 | 25.7 | 35.0 | 38.6 |

※ 자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대상동물의 출입 장소 제한 등 근거 신설(안 제7조)

- 안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소유주 등에게 등록동물의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제1항),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하는 장소,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2항) 근거를 마련했음.
-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줄일 최소한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청장·군수의 재량을 폭넓게 보장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절차 규정(안 제8조)

-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은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면서, 구청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공고기간(10일 이상), 지정기간(3년), 재지정(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음.
- 조례에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절차, 기능, 감독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새롭게 법에 규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기능)를 포함하여 상위법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대폭 정비하여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한 것임.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지정도 현행 연속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을 삭제하였는데, 경제적 이유와 민원 발생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 수요가 없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시도의 입법례¹⁾를 비교해보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을 늘리고, 재지정 제한을 없애는 조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과 조례에 따른 정례·수시 감독권을 더욱 철저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1) 타시도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

| 구분 | 서울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기간 | 3년 | 2년 | 2년 | 3년 | 직영 | 2년 | 3년 |
| 재지정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이하 생략)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유기, 사육포기, 피학대동물 등의 보호 의무 부여(안 제9조, 안 제11조)

- 안 제9조(동물의 보호·관리)는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 이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음(제1항).
- 또, 구청장·군수가 유기동물과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토록 하고(제2항), 구조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앞서 공수의료 하여금 질병·부상을 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3항), 보호 중인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음(제4항 및 제5항).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이하 생략)

- 안 제11조(과학대동물 보호 등)는 구청장·군수가 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시설 등을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음(제1항).
- 아울러,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항), 이러한 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법 제43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취득하게 될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 분양하도록 했음(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있어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과학대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물의 기증·분양 요건 규정(안 제10조)

- 안 제10조(동물의 기증·분양)는 구청장·군수가 법에 따라 유기·유실·과학대·사육포기 동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동물을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에 이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음(제1항).

- 반려·보호의 목적으로 동물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한 조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유기·유실 동물 등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는데(제2항),
- 번식기의 스트레스로 인한 유실 방지, 무분별한 임신에 의한 유기동물 발생 감소, 생식기 관련 질병 감소 등의 부분에서 중성화 수술 확산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입양자에 대한 경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안 제12조(동물보호센터 동물에 대한 특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보험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동물보호센터로부터의 동물 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줄이고, 난립하는 유사 동물보호센터 사칭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자 비용 지원대상을 법에 의한 동물보호센터로 한정할 것임.

○ 보호비용의 산정기준 합리화, 학대행위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 포기 유도 강화(안 제13조)

- 안 제13조(보호비용의 부담 등) 제1항에 따른 별표에서는 보호비용 산정기준 중 사료급여 기준을 기존의 월령 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인건비, 치료비 등 조례에서 정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또는 보호시설의 동물병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음.
- 유기·유실동물의 특성상 해당 동물의 월령을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월령에서도 체중에 따라 사료 급여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체중에 따라 사료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자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하도록 했음.
- 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하고있는데 비해,
- 개정 조례안은 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보호비용 면제를 강행 규정으로 하여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동물 학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물보호법」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동물보호·복지사업, 동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안 제15조)

- 안 제14조(동물보호·복지사업 지원)는 시장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유기·피학대·사육포기 동물의 보호 및 입양지원사업, 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도 반려동물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등 양육비용에 더 큰 부담을 갖게 되어, 그로 인한 양육 포기나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유기동물 증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개정 조례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과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은 입법 타당성이 높다할 것임.

- 안 제15조(동물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의 동물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군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항).
- 아울러,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환경 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개축 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제3항), 소음과 악취 문제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추진 근거(안 제16조)
 - 안 제16조(길고양이 관리 등)은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고(제1항), 길고양이의 중성화 후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했음(제2항).
 - 이는 길고양이 개체수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함으로써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반려동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협력체계 구축 (안 제17조, 안 제18조)

- 시장이 효율적인 반려동물 정책 수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했으며(안 제17조), 관련 대학·연구소, 동물보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안 제18조).
- 반려동물 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한 신설 조항으로, 동물 관련 전문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임.
- 동물보호·복지 분야가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동물의 생태와 습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기관, 실제 대부분의 정책을 수행할 구·군, 현장의 동물보호기관, 동물보호 민간단체까지 포괄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칙 주요 검토사항

- 부칙 안 제1조(시행일)는 조례의 시행일을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춰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2023년 7월 1일자 군위군 편입을 고려하여 부칙 안 제3조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음.

- 부칙 안 제3조(등물등록에 대한 경과조치)는 2023년 7월 1일자 군위군 편입에 따라 편입 당시 군위군에 등록된 등록동물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제1항), 아울러 군위군의 등록 동물은 2025년 7월 2일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제2항).

□ 검토결과

-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길고양이 문제 등은 생태계 교란과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후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간 법과 조례의 내용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대구시 동물보호·복지사업 시행의 근거가 될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규율 범위를 동물보호에서 동물 복지증진으로 확장하고,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면서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였음.
 - 또, 등록동물의 출입 제한 장소를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 연장(2년→3년)과 재지정 제한을 삭제하는 등 현실의 필요성에 맞춰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시장과 구청장·군수에게 유기·피학대·사육포기 동물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면서 피학대동물의 보호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역할을 적극 인정하였음.

- 동물의 기증·분양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 대한 경비지원 특례를 두어 유기·유실 동물 등의 입양활성화를 도모하였고,
 -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 동물보호·복지사업,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의 동물복지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실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개정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대구시는 개정조례의 취지에 따라 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동물과 사람의 공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실현하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조례의 취지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확충과 인력보강,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대구시 동물보호관련 현황 자료****1. (동물보호센터 현황)**

| 구·군 | 동물보호센터명 | 소재지 |
|------------|--------------------------------|---------------|
| 중,서,수성,달성군 | (사)대구시수의사회 (보호장소: 동물병원20개소) | 북구 호국로 229 |
| 동,남,북,달서구 | (사)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 | 동구 금강로 151-13 |

2 (동물등록 현황)

- 대상: 주택·준주택 등 2개월령 이상 반려견(필수), 반려묘(시범운영)

| 연도별 | 동물등록 현황(누적실적) | | |
|------|---------------|----------|--------|
| | 합계 | 개 | 고양이 |
| 2020 | 104,719두 | 104,710두 | 9두 |
| 2021 | 124,192두 | 123,905두 | 287두 |
| 2022 | 136,309두 | 135,222두 | 1,087두 |

3. (유기동물 발생현황)

| 연도별 | 유실·유기 동물발생 현황 | | | |
|------|---------------|-------|-------|----|
| | 합계 | 개 | 고양이 | 기타 |
| 2020 | 5,042 | 5,225 | 2,735 | 82 |
| 2021 | 4,405 | 1,573 | 2,757 | 75 |
| 2022 | 4,321 | 1,632 | 2,611 | 78 |

-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
- 유기동물 입양두수 : (2020) 1,985두 (2021) 1,698두 (2022) 1,600두